

# ‘석기 정국’ 일단락... 여야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與 ‘야권연대 원죄론’ 공세 vs 野 ‘국정원 개혁’ 재점화

###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도 점점 못찾고 신경전 가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로 ‘이석기 사태’ 정국이 일단락되자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2라운드 경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정국’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야권연대 원죄론’으로 야당에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장외투쟁 포기를 압박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 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때문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측의 신경전만 더욱 가열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협상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다”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양다리 끝내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정책 투쟁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기국회 세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빨리 만들어오라고 재촉했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보여준 ‘푹른 결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

기 의원은 작년 야권연대에 의해 혁명투쟁 교두보인 국회로 진출했다”면서 “이렇게 중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국민에게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의 직책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에 의해 뒤로 밀린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시키며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리는데 부심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정원 개혁 노력에 더 집중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잠시 국민 관심을 이석기 사건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처벌, 국정원 개혁법안의 마련을 위해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를 원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신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추진

위는 앞으로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여당의 공안정국 만들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이자 책동임을 알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공안 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국가정보기관 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를 국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추징금 낼까 수사 받을까’ 전두환, 고민 또 고민

### 검찰 은닉재산 수사확대 부담 소속 조만간 자진납부 가능성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82) 전 대통령 까지 겨냥한 상태다. 앞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는 지난달 구속됐고 처남 재용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장남 재국씨 소환 등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전달 230여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해 납부한 것도 전씨 측의 입장을 좁게 만들고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전씨 측은 ‘자진납부 아니면 고강도 수사’라는 두 방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진납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검찰의 수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씨 일가는 4일 오후에도 3차례 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검찰과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재용씨가 귀가하면서 말한 내용도 자진납부 가능성에 무게를 실게 한다. 재용씨는 4일 새벽 귀가 직전 취재진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가족 논의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경기 오산 땅과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3채, 조카 이재홍씨 소유였던 한남동 땅과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재국씨의 허브빌리지와 각종 미술품, 이순자씨의 개인 연금 보험 등을 압류한 상태이다. 이들 재산의 가치는 800억~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 측은 압류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비자금’이 유입됐거나 그로부터 증식된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보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도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존폐 기로’ 통합진보

### 극렬반발 속 여론 싸늘

### 할로찾기 모색 고심

### 당내 패권주의 비판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되며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통합진보당이 할로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에서는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자”고 당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5일 오전 수도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정희 대표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실질심사에서 변론했으며, 이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5명은 집회에 참가해 국정원 수사를 비판하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등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싸늘해 이런 반발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시국회의는 진보당에 “이 의원은 집회에 불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국회의의 관계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는 별개라는 것이 시국회의와 촛불 시민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기에 공안정국의 수사망에 소속 의원이 더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면 새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동요가 심화하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도 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당원은 “근본 원인은 패권주의다. 지난해 분당사태를 거치며 순혈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與, 이석기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 추진

### 탈북자단체, 진보당 해산 청원

새누리당은 5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의 직책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금주 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

았다. 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은 이날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한 10여개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석기의 국회 의원 제명과 체포 이전에 진보당 해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5일 광주공원 계단에서 “중북 세력 척결, 통합진보당 해체”를 주장하는 내용의 손팻침막을 든 채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13년 10월 01일

###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 전과목 메디컬타운

- |              |                           |              |                             |
|--------------|---------------------------|--------------|-----------------------------|
| <b>지상5층</b>  | 501호 내과<br>502호 치과        | <b>지상6층</b>  | 601호 안과<br>602호 이비인후과       |
| <b>지상7층</b>  | 701호 성형외과<br>702호 산부인과    | <b>지상8층</b>  | 801호 피부, 비뇨기과<br>802호 영상의학과 |
| <b>지상9층</b>  | 901호 한의원<br>902호 소아, 청소년과 | <b>지상10층</b> | 1001호 재활의학과<br>1002호 가정의학과  |
| <b>지상11층</b> | 1101호 신경외과<br>1102호 정신의학과 | <b>지상12층</b> | 1201호 정형외과<br>1202호 향문외과    |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 라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 |             |                     |             |                |
|-------------|---------------------|-------------|----------------|
| <b>지하1층</b> |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 <b>지상1층</b> | 롯데리아(맥도날드) 70P |
| <b>지상1층</b> |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 <b>지상2층</b> | PC방 203P       |
| <b>지상1층</b> | 지상1층 후대판매장 22P      | <b>지상2층</b> | 한정식 387P       |
| <b>지상1층</b> | 미용실 23P             | <b>지상3층</b> | 일식 387P        |
| <b>지상1층</b> | 베스키라빈스 44P          | <b>지상4층</b> | 패밀리레스토랑 387P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